

정보사회와 정치양식: 대화민주주의의 가능성

김현희* · 윤영민**

이 논문은 첫째, 정보화 · 지구화시대에 기존의 자유민주주의를 능가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양식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지적하였다. 둘째, 자유민주주의의 대안으로서의 대화민주주의에 대해 논하였다. 셋째, 대화민주주의가 사이버공간을 통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실현가능성이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고찰하였다. 대화민주주의가 정보사회에서 어느 정도 진작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은 사이버공간의 공공토론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긍정적으로 감지될 수 있었다. 이 논문에서 검토된 세 개의 공개토론퀁은 참여한 현안에 관해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지기에 매우 황량한 조건, 즉 모두 익명성이 높고, 완전히 개방되어 있으며, 발언 형식과 내용에 대한 제재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나름대로의 토론질서가 존재했으며, 토론자들의 관용과 수용 수준도 상당히 높았다. 사이버공간의 공공토론은 정보사회에서 대화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있어 시민들을 위한 훌륭한 학습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서론

사회민주주의권의 붕괴이후 민주주의는 거의 자유민주주의와 동의어로 이해되

*한신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관심분야: 노동 · 여성 · 정보. 주요 논문 및 저서: “대안정치세력으로서의 여성, 그 가능성연구: 1990년대 여성의 투표행태를 중심으로”(1999); “지구화, 정보화, 그리고 시민사회”(1999); 《정보공간의 정치와 시민사회 형성》(1999, 공저); *Working Class Stratification and the Demand for Unions in the United States*(1997).

**한양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 관심분야: 정보사회학, 사회조사방법론, 정치사회학. 주요 논문 및 저서: 《사이버공간의 정치》(2000), 《시민이 열어가는 지식정보사회》(1999, 공저), 《정보의 신화, 개혁의 논리》(1998, 공저), 《글로벌 네트워크》(1997, 공역), 《전자정보공간론》(1996)

고 있지만 기실 자유민주주의의 맹점은 현대사회에 지배적인 형태로서 나타나고 있는 민주주의의 형태, 즉 보통선거와 다수결주의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가 함축하는 내용을 살펴 본다. 정보화·지구화하고 성찰성이 증대하는 사회질서 속에서 좀 더 급진적인 형태의 민주주의와 새로운 정치의 개념을 요청하고 있다. 이 논문은 점증적으로 정보화·지구화되어 가는 현대사회에서 어떠한 형태의 민주주의가 요구되고 있으며 그 한 형태로서 부각되는 대화민주주의가 어느 정도의 실현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문의 구성을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자유민주주의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둘째, 대화민주주의가 갖는 이론적 배경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의 대안으로서의 대화민주주의에 대해 논한다. 셋째, 대화민주주의가 사이버공간을 통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실현가능성이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고찰한다.

2. 자유민주주의의 내재적 한계

1) 자유민주주의와 정치사사화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내용과 각도에서 시도될 수 있으나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민주주의는 거의 자유민주주의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다음에서 현대사회에 지배적인 형태로서 나타나고 있는 민주주의의 형태, 즉 보통선거와 다수결주의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가 함축하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절대군주론에 대한 공격과 급진적인 민주주의 사상에 대한 방어로서 출현한 존 로크(John Locke) 자유주의는 인민의 동의에 근거한 자유주의적 대의정부론을 내세우며 보통선거 제도를 수용함으로써 후일 현대 자유민주주의 이론의 근간을 이룬다. 이 전통을 이어 받아 1950년 이후의 현실에서 보통선거와 다수결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의 내용을 정당화하는 이론적 바탕은 조셉 슈페터(Joseph Schumpeter)에 근거하고 있다. 그는 민주주의를 경쟁적 선거에 의해 권력을 획득하는 하나의 정치적 과정으로 본다. 이는 자본주의의 경제원리인 자유경쟁 시장제도에 기반을 둔 정치제도이며 도구적 정치관과 인간상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슈페터에 따르면 민주주의란 다수에게 의미있는 권력을 제공해주는 수단이기보

다는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내는 방법으로서 더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슘페터의 민주주의이론은 시장을 모델로 하여 정립된 것으로서, 민주주의를 “정치적 결정에 도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인민의 투표를 얻기 위한 경쟁적 투쟁에서 승리한 개인들이 그 결정권을 획득하는 장치”로 정의한다. 또한 슘페터는 표를 확보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경쟁이 존재할 때만 전제적 통치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그의 민주주의 이론에 따르면 시민은 소비자로, 정치인은 기업가로 유추될 수 있다. 슘페터는 자유경쟁 시장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하여 현대의 자유민주주의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의 이론을 “시장민주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Schumpeter, 1950).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적 정치관은 권력지향적이든 이익지향적이든 간에 결국 도구적인 정치관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 자유민주주의 하에서의 시민의 정치참여는 통치자를 선출하고 정치체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데 불과하다. 여기서 대의민주주의는 도구적인 기제로 파악되고 권력이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함에 있어서 인간은 다른 인간들을 ‘협상·착취·조작’의 대상과 수단으로 삼게 된다. 이러한 도구주의적 정치관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정치란 일반시민들에게 그 자체가 보람되고 의미있는 활동이 아니라 고도로 소외되고 착취적인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적 정치관아래에서 인간은 본래 비정치적인 존재로서 그리고 정치활동보다는 사사로운 일에 몰두하기를 선호하는 사적인 시민으로 표상된다(강정인, 1998).

따라서 이러한 도구적 정치관은 현대 자유민주주의하에서의 정치를 다음의 내용과 같은 정치의 사사화(privatization)로 구조적으로 특징짓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첫째,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비참여의 팽배로서, 대중의 정치참여제도화와 이와 관련된 자유주의적 기본권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정치문제나 공적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정치활동에 잘 참여하지 않는다. 둘째, 정치문제의 사사화를 들 수 있는데, 즉 어떤 문제가 사회 일반에 걸친 공적인 문제로서 공동체의 정치적 결정이나 정책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산되고 고립된 사회성원들의 사적인 문제로서 치부해 버리는 것이다. 셋째, 정치영역을 사적인 이익추구 정신이 잠식하는 것으로서, 각 개인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영역에 참여하되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정신(public spirit)의 빌양에 의해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던 심성을 그대로 투사하

여 공적인 영역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행동한다. 이러한 정치의 사사화현상은 선거 및 대의기구를 포함한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제도가 초래하는 정치적 소외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본주의적 경제질서나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질서 있어서 근본적인 패러다임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정치의 사사화현상은 치유될 수 없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진다(강정인, 1998).

2) 대의민주주의의 폐해

자유민주주의가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실현하는 제도로서의 의미보다 자본주의 경제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자본주의를 지속·강화해주며 정당화해주는 도구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음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의 도구적 특성은 정치의 사사화를 낳음으로써 대의민주주의가 현대사회에 바람직한 정치제도인가 하는 의문점을 제기하게 한다. 특히 참여민주주의와 같은 민주주의 형태의 실현을 가능하게 해주는 정보화의 시대적·사회적 상황하에서 더욱 그러하다.

정보화·지구화 사회에서 대안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이론가들은 대의민주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정치인들이 공익보다는 소수 지배계층의 이익극대화에 앞장을 서게 됨으로써 정치엘리트와 시민사이에 괴리와 불신이 가득하게 된다. 둘째, 시민들은 선거라는 허울뿐인 정치적 쇼에 참가하는 투표기제로 전락하게 되어 대의민주주의는 시민의 진정한 정치참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의 기능도 지나치게 비대하여 국가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보다는 일부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셋째,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시민이 정치생활에 주인이 되지 못하고 탈정치화되어 구경꾼으로 전락한다. 넷째, 대안민주주의론자들은 특히 담론민주주의론자들은 대의민주주의는 다수결주의에 의해 차이의 문제를 민주주의 실현의 방해물로 취급하지만 진정한 민주주의는 차이가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자유롭고 공공적인 소통과정을 허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적 해결은 직접적인 숙의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며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차이들은 자율적이고 공적인 영역에서 논쟁을 통해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다(박주원, 1999).

3. 왜 ‘여기서’ 그리고 ‘이 시점에’ 대화민주주의가 쟁점화되어야 하는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유민주주의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배제된 가운데 이루어짐으로써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인민의 정치를 실현하지 못하는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의 맹점은 정보화하고 지구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를 요청하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기든스가 제창한 대화민주주의(dialogic democracy)가 유용한 지적 자원으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Giddens, 1994).¹⁾ 기든스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두가지 차원에서 논구될 수 있다. 하나는 민주주의가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구라는 것이며 또 하나는 민주주의가 대화를 통해 논쟁이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다룰 수 있는 공공영역을 창출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기든스가 말하는 대화민주주의는 후자의 내용을 포함한다. 정보화·지구화와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점도 바로 이 후자의 측면이다.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현 시기는 전 지구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말미암아 민주주의 기본 단위가 되는 정체(polity)가 의문에 부쳐지는 때이기도 하다(Held, 1991). 즉 민주주의를 논할 때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온 민족국가(nation-state)를 넘어서는 다양한 정치의제가 등장하고 있다는 말이다. 또한 민주주의의 확산은 기존에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어온 많은 부분을 새롭게 공적 쟁점으로 전환시키는 현상을 놓게 되었다(Giddens, 1991, 1992).

민주주의란 모든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평등하게 참여하는 정치체제이다. 역사상 자유민주주의를 포함한 어떠한 민주적 정체도 민주주의 이념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하지만 일정한 정치체제가 이 정의에 근접할수록 더욱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완벽한 이상형으로서의 민주주의의 형태를 제시하는 것은 현실과의 연관성 속에서 볼 때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다만 기존의 자유민주

1) 기든스가 말하는 대화민주주의외에도 담론적 민주주의와 급진적 민주주의와 같은 다양한 대안민주주의가 제시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대화민주주의는 담론적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주의가 갖는 문제점을 보완·개선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외연적 확산과 내포적 심화를 동시에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개념은 '민주주의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democracy)'로서 민주주의가 현실에서 달성될 수 있는 최종적 목표로서가 아니라 지속적인 민주화의 장정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함을 내포한다.²⁾

민주주의의 민주화라는 개념은 자유민주주의의 관행과 실제를 민주주의로 인정하되 자유민주주의가 완성태로서가 아니라 더 민주화되어야 할 과정임을 함축한다. 기든스는 현대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를 넘어 대화민주주의에 의해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그리고 지구화·정보화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민주화' 개념을 통해, 새로운 정치개념이 필요함을 역설하였으며 민주주의의 외연적 확산과 내포적 심화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였기에 다음에서 그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기든스는 탈전통화, 정보화, 지구화가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기존의 대의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 모델은 더 이상 현실적 합성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그 대안으로서 숙의민주주의가 제시되었지만 그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대화민주주의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점차 성찰성이 증대되는 사회질서 속에서, 사람들이 원하기만 하면 정치에 무관심해질 자유가 있는 곳에서, 단지 민주적 투표기구, 대의제 그리고 의회가 존재한다고 해서 정치적 정당성이 쉽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하에서의 대의민주주의와 대비되는 숙의민주주의는 정치의 장에서 정책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려는 방식이다. 숙의적 접근방식은 단 하나의 올바른 정답이 있을 수 없는 혹은 해결책이 철저히 경합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숙의' 개념의 강조점은 올바른 답을 찾는 발견적 과정으로서의 심의에 있는 것이 아니며 그 강조점은 모든 견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개방된 토론과정과 그 토론과정이 결론에 반영됨으로써, 그 결과를 정당화 시킬 수 있다는 데 있다. 정당성을 창출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숙의민주주의 원칙이 더욱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리하여 숙의민주주의는 정부 여러 분야에서 선명성

2) 새로운 민주주의론자들은 '어떤 사회주의인가'의 문제보다 '어떤 민주주의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며 민주주의도 사회주의만큼 진보적이라는 견지에서 '민주주의 영구혁명'을 테제로서 받아 들인다.

이 큰 상태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민주주의 개념은 거기에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가 아닌가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고 정책 협안에 대한 공적 심의 여부에 의해 규정된다. 이러한 숙의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민주화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기든스는 여기서 더 나아가 지구화하고 성찰성이 증대하는 현대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맹점은 숙의민주주의보다 좀 더 급진적 형태의 민주화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대화민주주의의 확대가 유일한 것은 아니겠지만, 민주주의를 민주화하는 과정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

기든스(1994)는 현대사회에서 대화민주주의가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기든스는 개인들이나 집합체들 사이의 가치관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음의 네가지 방법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1) 각각 전통의 터잡기, 2) 적대적인 상대로부터의 관계해소, 3) 담론 혹은 대화, 4) 강제 혹은 폭력이 그것이다. 네 가지 방법 모두 모든 문화의 대부분의 행위환경에서 적어도 내재적 가능성으로서 발견된다. 전통이 지배적 영향력을 가진 사회들에서 전통적 신념과 관습은 수호자들의 활동을 통해 여과됨으로써 대개 활동의 자유를 상당정도 획득한다. 터잡은 권력은 대체로 은폐되고 문화적 적응은 무엇보다도 지리적으로 분절된 형태를 취한다. 여기서 관계해소는 능동적 과정이라기 보다는 지역간 소통의 장벽을 가진 전근대체제를 시공간적으로 조직한 결과이다. 그렇지만 근대성의 등장 그리고 전지구화의 심화와 더불어 이러한 상황은 대체로 완전하게 침식된다. 탈전통화한 현대사회에서 전통은 ‘설명하기’와 스스로를 정당화할 것을 요구받는다. 일반적으로 전통은 담론을 통해 스스로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한에서만 지속되고 다른 전통들 뿐 아니라 대체가능한 행동양식과도 열린 대화를 시작할 용의가 있다. 지구화된 사회에서 관계해소는 일정한 방식으로 일정한 상황에서는 가능하지만 점점 더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관계해소가 더 이상 실현가능한 선택지가 아닌 사회질서를 가진 많은 지역에서 대화민주주의 –상대방의 신실성을 인정하고 상호적인 과정으로서 상대방의 견해와 사상을 듣고 논쟁할 준비가 되어 있는– 는 폭력을 대신할 유일한 대안이다. 탈전통화된, 전지구적인, 그리고 정보화된 사회에서 우리는 개인적 삶의 수준에서 ‘감정의 민주주의’로부터 전지구적 질서의 경계 바깥까지 펼쳐진 ‘대화민주주의’를 통해 민주주의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든스는 사회적, 환경적 여건의 변화가 ‘대화민주주의’를 유일한 대안으로 만드는 측

면이 있으며 동시에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의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고 본다.

숙의민주주의의 개념은 주로 공적 정치영역에 국한되어 있으나 대화민주주의는 국가영역의 밖, 즉 사적 영역 또는 전지구적 영역 등의 몇몇 주요 맥락에서 증진될 수 있다. 공식적 정치영역 밖에서 대화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영역, 즉 다음의 영역들에서 민주주의의 민주화나 정치적 급진주의의 쟁점을 위한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Giddens, 1992).

첫째, 개인적 삶의 영역 — 결혼, 섹슈얼리티, 친구관계, 부모·자녀관계, 그리고 친족관계 등 —에서의 민주주의의 실현과 관련된다. 탈전통화와 성찰성의 증대가 이들이 갖고 있던 기존의 성격을 변화시켜 사적 관계에 있어서 순수한 관계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여기서 순수한 관계(pure relationship)라는 것은 관계, 그 자체를 위해서, 즉 타인과의 결합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보상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유지되는 그러한 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개인들간의 순수한 관계의 추구와 대화민주주의의 실현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 서로 평등하게 만나는 개인들간의 대화에는 그들의 상호관계에 핵심적인 교환적 속성이 있다. 즉 좋은 관계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과 정치적 민주주의의 형식적 기제간에는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³⁾

둘째, 사회운동과 자립집단들은 국지적·지구적 사회활동에서의 성찰성의 증가를 보여주는 현상인 동시에 이들 조직은 다시 성찰성의 증진과 민주주의에 기여한다. 민주주의, 사회운동, 자립집단 간의 내재적 관계는 원칙적으로 그들이 공적 대화의 공간을 연다는 데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사회운동과 자립집단의 민주적 특성은 대부분의 연관된 문제들에서 공적 대화를 위한 공간을 열어 놓는다는 사실로부터 도출된다. 이들 사회운동과 자립집단들은 이전에는 토론되지 않았거나 또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해결되었던 사회적 행위들을 담론의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여성운동, 환경운동, 평화운동은 이러한 성과를 얻었으며 그러한 운동과 집단들은 범위상 본질적으로 전지구적이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민주주의를 널리 확산하고 있으며 국제기구 뿐 아니라 국경을 넘어 다양한 집단들을 통해 작동하는 대화민주주의의 기제는 이러한 의미에서 매우 큰 중요성을 갖는다.

3) 이 두 개념은 모두 헬드가 '자율성 원칙'이라고 부르는 것의 발전에 의존하며 강제력이 작용하지 않고 공적 공간을 차지하는 대화는 분쟁을 잠식시키는 수단일 뿐 아니라 상호관용의 분위기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셋째, 대화민주주의는 광대한 지구적 질서에 관심을 갖는다. 지구화와 연관된 많은 것이 민족국가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민족국가를 거치지 않는다. 헬드의 ‘세계민주주의’ 모형 같은 조직은 대화민주주의의 발전 없이는 국가 단위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적 체제와 같은 한계점을 노출하게 된다. 전지구적 수준에서 대화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민주화를 의미하며, 또한 다른 대화기제들의 확산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구적 사회운동과 자립집단들은 많은 상황에서 국가 및 기업조직과의 대화공간을 개방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기든스는 민주주의를 이해관계의 대변이라는 측면에 국한시키지 않고 민주주의를 사적 인간관계에서 전지구적 질서에 이르기까지 의사소통의 자율성이 증진되고 그러한 의사소통이 정책들과 여러 활동들을 형성할 수 있도록 대화를 구성하는 상황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⁴⁾ 또한 기든스는 정치의 대상도 공적 정치 영역 뿐 아니라 사적 영역으로 여겨졌던 부분까지도 포함시킨다. 사적 영역의 문제도 논의와 토론을 통해 공론화 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정치 또는 민주주의의 범위를 확대시켰으며 이 개념과 관련해서 새로운 차원을 제시하고 있다. 기든스는 정치 또는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도입의 필요성을 규범적인 차원에서 뿐 아니라 탈전통화된, 지구화된, 정보화된, 그리고 성찰성이 증대된 사회에서 요청되는 역사적 산물로서 파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기든스의 대화민주주의의 개념은 사적 영역 뿐 아니라 전지구적 질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됨으로써 공론장의 확대를 가능하게 하며 이러한 공론장의 확대는 결과적으로 시민사회 또는 세계시민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으로 해서 민주주의의 민주화에 진일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4.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과 대화민주주의의 개념적 관련성

19세기 중반에 교회와 국가에 대한 신흥자본가의 대항으로서 언론의 자유, 정치 개혁, 대의제 확대요구를 제안한 부르조아 공공영역이 형성되었다(Habermas, 1989).

4) 숙의민주주의도 숙의의 공개되는 측면, 즉 투명성을 통한 정당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대화 민주주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공공영역에서는 공개적 논쟁, 비판적 논의를 통해 교회와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을 확보하였다. 하버마스는 공공영역이 정치·경제로부터 자율적인 공론의 장으로서 시민의 자유로운 참여와 비판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여론형성의 장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보았다. 이러한 공공영역의 형태는 자본주의의 확산과 팽창으로 인해 재봉건화(refeudalization)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⁵⁾

자본주의의 확대로 사유재산과 공공영역의 상호침투현상이 진행되었으며 홍보와 로비의 확산으로 공공영역이 자본가 이해추구의 장으로 변모해 가며 대중매체는 독점자본주의의 이해를 대변하며 정보의 제공자에서 여론의 형성자로 변형되었다.⁶⁾ 이와같이 공공영역이 위장된 이해의 홍보공간으로 변질되었으며 자본가들의 전시를 위한 행사로 전락되는 형태로 공공영역의 재봉건화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요약하면 하버마스의 공론장이론은 자본과 권력에 의해 식민화된 생활세계에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확산시켜 체계와 생활세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공론장의 활성화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버마스는 담론의 원칙에서 규범적 정치이론의 기반을 마련하며 그 개념적 결과물이 숙의정치(deliberative politics), 시민사회, 소통권력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통의 맥을 이어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확대 또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추구, 그리고 ‘이상적 대화상황(ideal speech act situation)’⁷⁾ 등의 개념을 발전시켜 기든스는 기존 자유민주주의의 맹점을

5) 시민사회의 경제체제로 등장한 자본주의는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간의 계급갈등을 초래하여 시민사회를 불평등과 분열의 전투장으로 만들었으며 이러한 자본주의의 확대·팽창에 따라 시민사회의 약화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국가와 경제의 역할이 급속하게 증대한 반면, 시민사회는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다. 경제는 시민사회에서 분리되어 시민사회를 억압하는 또하나의 힘으로서 작용하여 시민사회는 근대 초기와는 다른 위상과 내용을 지니게 되었다. 하버마스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침체현상을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라는 명제를 통해 설명하였다. 다시말해 행정적·관료적 논리가 지배하는 국가부문과 이윤추구의 화폐논리가 지배하는 경제부문이, 즉 체계가 과도하게 성장하여 생활세계의 영역에 침투하여 이를 파괴하고 왜곡시켰다는 것이며, 생활세계에 고유한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확산시켜 체계와 생활세계 간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영향력의 정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Habermas, 1989; 김성국, 1998).

6) 여론의 조작과 통제가 정치와 소비영역에서의 정보조작과 여론의 회유와 조작 등을 통해 공공영역이 부식된다. 따라서 정보의 이중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7) 하버마스의 이상적 대화상황이란 Kant의 초월주의에서 근거한 것으로써 상황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양자의 지식수준이 동등하고, 외부로부터의 억압과 매수 등의 강제가 없고 대화를 할 태도가 갖추어져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당위적인 국가적 의무를 비판하는 것에서 접근되어져야 하며, 군문제에 대한 국가정책에 대한 딴지를 걸어야 하는 것이다. 군문제에 대한 국가정책, 국민의 의무에 대한 비판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군가산점에 대한 논쟁은 진전없는 소모적인 논쟁에 그칠 것이다.

번호: 2078/2319 토론자: NICE98

토론일시: 2000년 01월 10일 13:32 수신자: 폐미반석

주제: [답장] <군가산점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급선무>

안녕하세요. 올리신 글 잘 읽었습니다. 호~! 논리정연한 글 세부적으로 잘은 이해 안되지만 어쨌든 시야를 넓히는 글 음~! 뭐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해결하려면 조금은 복잡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치에 맞는 글이 아닌가도 생각해 보면서 …

솔직히 한국의 IMF시대로 접어들면서 경제의 몰락이 이 같은 분쟁을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볼 때 어떻게 결정이 난다고 해도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한 어떠한 명분이라도 설득력을 얻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현 정부는 국가경제력 회복으로 인하여 직장 늘리기에 성공하지 못하는 한 무궁무궁한 후환이 이어진다는 점 ^_^ 음 너무 심한 협박인가요.

가산점이 더 많이 불던 아예 없어지던 직장만 많다면야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인식에 대한 전환과 의식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경제의 힘이라 생각됩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 논리대로만 살수는 없고 논리를 벗어난다고 해서 꼭 문제점은 아니라는 생각에서 솔직히 이번의 토론에서 남녀식의 분쟁으로 확대되는 건 좀 뭐하지만 남자들도 자신들의 불만을 표시한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성공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번호: 2080/2319 토론자: KYCHUNG

토론일시: 2000년 01월 10일 14:26 수신자: ALL

주제: 쭈압 … 폐미 반석님 …

분명히 님의 말씀대로 군가산점 문제는 남녀차별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군필자와 미필자의 문제이지요. 그것을 남녀 차별 문제로 끌고 간 것은 위현 소송을 낸 여성단체들이 아니었던가요? 결국은 이런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일고 말았지만 … 어느 민주주의가 발전된 선진국(가까운 예로 미국만 봐도)에서도 … 군가산점 문제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놈의 나라가 여자들의 표밖에 안보여서 당연한 혜택을 위현이라고 판결하는 우를 범했지만요 … 그럼 …

2033 LJY2848 ALL 000109 13 53 여러분 거친 말들은 삼가합시다.

2056 IRIZERI ALL 000110 10 42 비논리적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는 필요하죠

2060 IRIZERI ALL 000110 16 42 감정을 표현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요

이 토론은 참여가 왕성했기 때문에 기간이 2주일 연장되었다. 그러나, 토론이 시작된 지 2주일정도가 지난 후부터 1주일정도, 게시된 글로는 세 번째 7-800건 정도를 보면 <답장>이 약 35%까지 올라갔다(<표 3> 참조). <답장>은 중반부와 비슷하게 진지한 내용이었다. 아래 길게 인용한 게시문들은 토론이 대단히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⁹⁾

번호: 2076/2319 토론자: 폐미반석

토론일시: 2000년 01월 10일 13:05 수신자: ALL

주제: <군가산점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급선무>

그러나 나를 비롯해서 군가산점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남성들이 군대에 가는 것을 당연시하고 단지 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과 보상만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군가산점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군대에 가는 것도 쉽고 군가산점으로 차별받는 것은 더더욱 쉽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군가산점에 대한 논쟁은 여남의 대결구도에서 벗어나야 하며 또한 소모적인 토론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군가산점의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 논의의 초점은 우선 군가산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논의의 접근을 다른 각도에서 해야한다는 것이다.

군복무의 문제는 당위적인 의무가 아닌 권리와 참여의 문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가산점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특정한 성별(남성)에게 군복무가 당위적으로 의무화되는 것을 지지하거나 옹호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군가산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군필자 그리고 군대를 가야하는 남성들과 싸움(설전)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이 군가산점을 문제삼는 것은 군복무를 특정한 성별에게 당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과 특정한 신체조건만을 국가적으로 인정하여 그 밖에 신체조건을 지닌 사람들에게 열등성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리고 사회구성원을 군필자와 군미필자라는 두 개의 집단으로 이분화시키고 하나의 집단에 혜택을 주어 군필자와 군미필자간의 대립과 질시를 형성시키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렇다면 군가산점

9) 여기 인용문들은 편집된 상태이다. 길이를 줄이기 위해 여러 곳을 생략하였고,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맞춤법을 다소 손질하였다.

- 893 MHW1219 ALL 991229 20 137 군가산점 벌써 폐지되었어야 할 것 아닌가?
- 897 SEAN5021 MHW1219 991229 36 90 [답장] 군가산점 벌써 폐지되었어야 할 것 아닌가?
- 933 HUGEMAN ALL 991229 7 54 여기서만 토론할게 아니라. …
- 972 PRAXISLR ALL 991229 16 193 유치한 남성들이여, 무식한 남성들이여.
- 979 KIM1266 PRAXISLR 991229 31 79 [답장] 유치한 남성들이여, 무식한 남성들이여.
- 1006 J7M7 ALL 991229 9 42 보상과 가산점
- 1011 TH0601J7M7 991229 9 40 [답장] 보상과 가산점

토론이 종반부에 들어서면 대안을 모색하려는 노력도 드물지 않게 나타난다. 한 편으로는 토론자들이 결론을 찾지 못하는 토론에 대해 아쉬움을 갖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천리안에서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공개토론이 3주일간 지속되도록 되어 있어 2주일쯤 지나면 토론이 종반에 접어들었다는 부담을 갖는 참여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시 게시문의 제목을 훑어보면 그러한 흐름을 읽을 수 있다.

- 1651 ECOKIM ALL 000104 40 55 [정치적 행동을 위한 지침을 마련합시다]
- 1843 JIN3186 ALL 000107 7 136 남성여러분 이번 총선에 국민회의, 자민련 절대루 씩지 맙시다
- 1861 KOOJS55 LEGINA54 000107 1 72 legina54님 토론이 아닌 글은 올리지 말아주십시오..
- 1871 C1BC ALL 000107 36 81 여성단체와의 대화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 1893 HYUNMU21 ALL 000107 19 65 ♣ 가산점의 대안을 찾아봅시다.
- 1899 KSJ261 ALL 000107 36 35 군가산점 문제의 해결과 합리적 인 판단(내 생각에)
- 1912 IRIZERI ALL 000107 37 53 가산점 지지자들의 입장에 대한 새로운 제안(주장)
- 1916 KOOJS55 IRIZERI 000107 27 38 올바른 토론은 올바른 논거에서 비롯됩니다. …
- 1918 S9811178 ALL 000107 27 35 1912번 주장에 대해
- 1926 KOOJS55 IRIZERI 000108 24 48 음 … 글을 읽으실 땐 … 바로 읽어주십시오. …
- 1939 WINYMAN ALL 000108 34 99 차별과 구별은 구분되어야. …
- 1943 KOOJS55 ALL 000108 17 61 제안하나 합시다! 
- 1944 HYUNMU21 ALL 000108 31 49 감정싸움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읍시다.
- 1978 JOOWON11 ALL 000108 14 49 남성과 여성의 성 대결 구도로 가서는 안 된다.

- 219 URINAMU ALL 991226 19 74 열받아서 잠이 안옵니다
 228 아침느낌 ALL 991226 49 56 아~~~~~ 탄식만 나온다.
 318 솔찬하이 ALL 991226 1 66 나도 군번 반납한다. 92-76061778
 321 MEOSMA ALL 991226 13 62 국가는 신의를 버렸다 … 우매한 몇x들 때문에
 358 JAEON ALL 991226 10 83 징병제도 현법소원의 대상이다.

이 토론에서는 첫 5일 정도, 게시된 글 수로는 첫 7-800건 정도가 초반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때 상호간의 대화는 게시된 글의 약 15%에 불과하다(〈표 3〉 참조). 천리안 토론실에서는 상호간의 대화가 특정한 ID를 가진 글 게시자에게 <답장>이라는 형태로 표현된다. <답장>이 자주 단순한 비난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답장>을 쓴다는 것은 상대방의 글을 주의 깊게 읽었다는 증거이고,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한 상대를 의식하기 때문에 비교적 조심스럽게 글을 쓰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답장>이 많이 올라온다는 사실은 토론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토론이 중반부에 들어가면서 상대방 주장에 대한 논리적 비판이 훨씬 눈에 자주 뛴다. 중반부는 초반부 다음의 일주일 정도, 게시된 글 수로는 두 번째 7-800건 정도인데, 그 중 <답장>은 약 25% 정도이다(〈표 3〉 참조). <답장>의 내용도 초반부보다는 진지하다. 이 단계에서 토론자들은 다소 마음의 평정을 회복하고 상대방의 의견이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아래 인용된 게시문들의 제목은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준다.

- 809 KSJ261 ALL 991228 14 56 무엇이 핵심인가?
 810 JI1027 ALL 991228 2 50 바로 위에 서명 포럼이 있어요. … 서명하세요. …
 811 겨울애 ALL 991228 16 56 다시 군대 입대하는 마음으로 뭉치자 500만이여
 812 KOHS5 ALL 991228 25 144 친구가 미군 예비역인데. …
 813 IEDGKIM ALL 991228 21 85 예비역이여! 우리끼리 침뱉어서는 안 된다.
 819 PPYUNG ALL 991228 31 55 대안 좀 제시해 보슈. …
 820 KOHS5 ALL 991228 15 58 공무원 채용시 봉사점수를. …
 821 KHAN3330 ALL 991228 6 89 방위나 협력이나 똑같은 의무수행인데
 881 주녀비 ALL 991229 7 58 여러분, 욕설은 자제합시다

〈표 3〉 군가산점제도 폐지 토론실의 흐름

게시기간	12/27-12/28	12/29-12/30	1/2-1/5	1/8-1/11
게시번호	2-201	1,000-1,199	1,500-1,699	1,924-2,123
답장건수	33	29	52	71
답장비율	16.5	14.5	26.0	35.5

각주: 답장이란 특정한 상대를 수신자로 지명하여 게시하는 글을 말함

의 관찰에 의하면 사이버공간의 공공토론은 일반적인 인식보다 훨씬 건강하고 생산적이다. 앞의 사례들은 온라인 공공 토론에 육설이나 감정적 표현이 많다고 할 수도 없고, 네티즌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지나치게 자극적인 표현에 대한 자발적인 통제 노력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사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감정표출이 토론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감정 대립은 토론의 어느 시점에서든 다시 촉발될 수 있지만 토론의 커다란 흐름을 바꾸어 놓지 못한다.

이 토론의 대체적인 흐름을 보면, 초반부에는 토론 안전에 대한 네티즌들의 감정이나 의견이 일방적으로 표출된다. 상호간의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진지한 토론이라기보다 일방적인 비난이 많다. 아래 게시문의 제목만 훑어보아도 초반의 내용이 얼마나 거칠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 5 SEAN5021 ALL 991224 14 291 총선에서 여성표좀 벌었겠군 ...
- 12 JAEON ALL 991224 15 284 26개월의 가치
- 14 SIBELL5 ALL 991224 3 240 여성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 13 PETRUCCI ALL 991224 34 301 여성학자들은 사기꾼이다
- 19 KBSE ALL 991224 23 251 ◆ 차사고 더러운 성차별~~~!!!퉤~
- 18 VECTOR10 ALL 991224 71 304 ★국방력 약화? DJ의 속셈? 빨갱이? 그리고?
- 31 J1269 ALL 991224 35 253 가산점폐지에 열내는 쪼다들 ...
- 37 PETIT612 J1269 991224 17 213 가산점폐지에 열내는 쪼다들이라고 말하는 쪼다
- 136 회색모자 ALL 991225 11 92 울분이 치민다..
- 152 캣순 ALL 991225 45 93 헌법재판관들은 군대를 다녀 왔나요?
- 153 동방사자 ALL 991225 15 155 현재 재판관 군경력 일부는 이렇다!

토론일시: 1999년 12월 01일 19:26 수신자: 찌리릿

주제: 그렇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다!!

아예 헌법에 명시하자.

1조 1항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전제국가다.

2항 대한민국 대통령은 무한한 권력을 지니며 대통령한테 개기면 다 나쁜놈이다.

3항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정상으로 해서 8~수백개의 계급으로 나뉘어진 신분제 국가이며, 하위신분은 감히 윗분들한테 개기면 안된다. 단, 신분을 나누는 기준은 학벌과 직업과 돈으로 나뉜다.

(이하 생략)

이 두 가지 토론은 사회자가 수행한 역할의 두고 볼 때 매우 대조적이다. 전자는 사회자가 지나치게 방임적인 반면, 후자는 사회자가 지나치게 개입적이다. 이 사례들은 자발적 공간의 참여자들이 매우 독립적임을 보여준다. 성인전용영화관의 경우에는 사회자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참여자들이 나서서 사회를 진행하고, 국가보안법의 경우에는 사회자가 토론의 진행에 지나치게 개입해도 네티즌들은 사회자의 행동을 거의 무시하면서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일반 참여자에 대한 사회자의 영향력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3) <군가산점 폐지 토론> 사례

앞의 토론실들에는 네티즌들의 참여가 비교적 적었던 반면 <군가산점 폐지>는 최근에 가장 많은 네티즌들이 참여한 토론실 중의 하나이다. 그 제도에 의해 실질적으로 심각하게 피해나 이득을 보게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제도의 상징성에 집착하거나 도전하는 사회집단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다수의 군필자들은 군가산점을 군복무에 대해 국가가 표하는 최소한의 경의로 간주하는 반면, 많은 여성들은 군가산점이란 대표적인 여성차별제도라고 생각한다. 이 토론은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앞의 경우와는 다소 다른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이 사례는 네티즌 다수가 참여하는 뜨거운 공공 토론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 PC통신이나 인터넷의 공개토론실이 감정싸움이나 역정보(misinformation) 등으로 얼룩져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이 사례들

번호: 24/78 토론자: DOLPARI

토론일시: 1999년 12월 01일 14:52 수신자: ALL

주제: 국보법을 나둬야 하나? 없어져야 하나?

국가의 보안을 위해서 필요한 법. 그래서 국가의 보안을 위하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존속을 시켜야 한다?

그러면 이제껏 제대로 국가의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역할을 했느냐? 아래 자료들에서 보면 그렇지 못하고 역행하는 부분이 많았는 모양인데 … 차라리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고 병신 만드는데 사용이 되었다는데 …

번호: 37/78 토론자: 피폭

토론일시: 1999년 12월 04일 20:19 수신자: MAGI2ND

주제: [답장]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바쁘시지 안다면 keshanul님께서 올리신 자료 글 번호 2번, 3번, 4번을 함 읽어보시고 얘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정말로 시간이 남으시면 비교적 쉽게 풀이해 논 제 글을 한 번 더 읽고 두 번 더 생각해보시면 더없이 좋겠구요

아 … 허기진다

번호: 38/78 토론자: MAGI2ND

토론일시: 1999년 12월 04일 23:58 수신자: 피폭

주제: 그래서요?

할일이 없어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요? 수정이냐 재작성이냐 하는 답은 나오지 않네요.(이상 인용문의 고딕체는 필자들이 넣음)

플레이밍이 발생할 소지가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토론 상대방을 심하게 자극하는 발언은 나오지 않았으며, 따라서 플레이밍이 발생하지 않고 토론이 끝날 수 있었다. 물론 신호에 대한 잡음의 량이 극히 적었다. 토론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는 말이다. 앞의 예에서 잡음을 크게 일으켰던 여신픽클이라는 ID의 참여자가 이 곳에도 나타나 아래와 같은 글로 토론을 방해하려고 하였으나 단발성으로 끝났다. 토론자들이 그의 발언을 철저히 무시하고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번호: 25/78 토론자: 여신픽클

의원들이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모두 ‘분홍색’이라고 판단하시는 건지요?

만일 그렇다면 이건희, 최순영, 김우중 등 기업 돈 빼돌려서 제 돈으로 쓰는 기업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업주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적절한 힘을 가지고 균형이 잡힌 사회가 올바른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꼬리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논의 주제와 약간 맞지 않지만, 의외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럼 이분들은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 자본주의 사회라면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노동자들과 그 노동자들의 권익향상 및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노동운동이 있으니까요 — 또는 그런 노동운동을 마구 탄압했던 전체주의의 역사들, 그러니까 전두환이나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 미국의 매카시즘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정말로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토론에 관련된 자료가 매우 풍부하게 제시되었다. 사회자는 토론의 초기에 국가보안법 전문(全文)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 토론은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면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는 사이버공간의 장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물론 참여자들이 얼마나 게시된 자료들을 꼼꼼하게 읽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발언 내용을 보면 적어도 몇몇 사람은 매우 주의 깊게 읽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의 인용문들에서 참여자들은 게시된 자료들을 읽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거나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번호: 6/78 토론자: HLILOJ

토론일시: 1999년 11월 29일 12:36 수신자: ALL

주 제: 질문 한가지 더 ...

아래 그 이유를 봤는데..이미 다른 법률로 존재한다니 폐지사유가 정당한 거 같음...
근데 그러면 헌법도 뜯어고쳐야겠군요. ... 아래 이유대로라면 근데 왜 헌법은 아무애
기도 안하는 건 지.. 국보법에 문제되는 조항이 헌법에도 존재하는데 같이 논의되야 하
는 건 아닌지. ... 그리고 아래 글 보니 국보법이 꼭 문제되는 것만 있는 것도 아
니군요. ... 쩝

번호: 49/78 토론자: KESHANUL

토론일시: 1999년 12월 08일 10:14 수신자: ALL

주제: [의장] 부탁의 말씀

이 토론실을 개설한 목적 중의 하나는 국가보안법의 실체를 보면서 토론하자는 것 이었습니다.

(중략)

일반 국민들이 국가보안법 조문이나 분석, 실제 적용 사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2번, 3번, 4번, 5번, 8번 자료는 꼭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을 떠나서 국가보안법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한번쯤 읽어 볼만한 자료입니다.

(이하 생략)

사회자가 이 의사진행발언 중에서 읽어보기를 권장하는 자료 중 2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중립적인 의사진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번호: 31 / 78 토론자: KESHANUL

토론일시 1999년 12월 03일 13:55 수신자: BURMUDA

주제: [의장] 남길 것과 없앨 것?

BURMUDA님이나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다른 분들은 국가보안법의 한 조항도 없앨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혹시 없애거나 고칠 게 있다면 어떤 항목을 그럴 수 있는 건지, 꼭 있어야 할 조항이 있다면 어떤 건지, 밝혀 주시면 토론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그냥 분홍색이 될 거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2번에 올린 국가보안법 전문과 서준식씨의 국가보안법 해설에 관한 자료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조를 제외하고는 국가보안법의 대부분 조항이 형법에서 중복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7조는 북한에서 돈 받아온다, 뭐 이런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BURMUDA님이 쓰신 글에 대한 질문인데, 대학생들이 노동 현장에 들어가서 노동운동에 뛰어 든 게 북한을 돋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모두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지금 그런 학생운동 출신의 국회

〈표 2〉 국가보안법 폐지(혹은 개정) 토론실 개요

주제	국가보안법 개정 혹은 폐지
기간	1999. 11. 29 – 1999. 12. 20
토론내용	계시건수 77건
	폐지론 28건(사회자 11건 포함)
	개정론 5건
	유지론 14건
	논제 외 발언 1건
	의사진행발언 5건(사회자 3건 포함)
	자료 게시 15건(사회자 게시, 전체게시량의 35%)
	기타 9건(삭제 및 입장 불명)
	S/N 78.78(111,950/1,421자)
	플레이밍 없음
	조정 높음
	소수지배 높음(사회자 38%, 29/77건)
	이해/합의 합의 없음

각주: S/N = Signal-to-Noise ratio(신호-대-잡음 비)

로 토론을 몰아갔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정도이다. 77건의 글 중 29건이 사회자가 게시한 글. 자료 게시 15건, 의사진행발언 3건, 폐지를 지지하거나 유도한 발언 11 건. ‘성인전용영화관 제도 토론’ 사례에서는 총 60건의 게시물 중 사회자의 발언은 자료 게시 2건, 의사진행발언 1건으로 도합 3건에 불과하였으며, 사회자의 존재를 거의 인식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렇다고 사회자의 입장에 반대하는 발언이 적게 나온 것은 아니다. 사회자가 거의 일방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두둔하였으나 개정(5건)과 유지 입장(14 건)을 합해서 19건으로 찬성 입장 17건(총 28건에서 사회자 글 제외)보다 더 많이 올라왔다. 네티즌들의 자유주의적 경향을 고려할 때 다소 의외의 결과이다.

사회자는 국가보안법 전문과 국회의원 설문조사 결과를 제외하고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자는 내용의 자료만을 일방적으로 게시하였다. 성인전용영화관 토론의 사회자가 찬반 양론의 자료를 올린 것과는 대조적이다.

치 못 본 척 토론을 진행하였다. 과격한 표현에 대해 참여자들이 갖고 있는 관용이 놀랍다. 다음 글은 논제 벗어나기에 대한 네티즌들의 생각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번호: 58/61 토론자: MAXIM4U

토론일시: 1999년 12월 16일 02:36 수신자: ALL

주 제: [잡설#1] 창녀론자에게..(삭제해도 됨)
(중략)

〈덧말〉

여기가 멤버십 토론판이라면.. '논제에 충실하자' 는 얘기가 설득력이 있지만.. 판만 열리면 '야~ 1등이다' 가 1번 게시물이 되는 판에서.. 더러 허접한 토론자 썹기도 하고 그래야 재미 있는 거지.. 안 그려~?

'여신픽클'이라는 ID의 참여자가 토론의 흐름을 훼방하면서 토론은 다섯 차례나 논제를 벗어나고 심각한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다시 원래 토론 주제로 복귀하였다. 더구나 놀라운 점은 사회자의 조정 없이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진행 발언이 나오고 토론이 속개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참여자들의 관용적 태도가 토론이 구심력을 가질 수 있게 했을 것이다.

이 사례는 사이버공간의 공공토론에서 어느 정도 잡음은 피할 수 없으나, 잡음이 반드시 토론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흥미를 일으키는 요소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아마도 잡음이 전혀 없는 토론을 오히려 답답하게 느끼는 참여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잡음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신호 전달을 심각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잡음이 적은 편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2) 〈국가보안법 폐지 토론〉 사례

다음의 사례는 온라인 공개토론이 앞의 경우와 매우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사례는 무겁고 전문적인, 그러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제가 공개토론실에서 어떻게 다루어질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이 토론실의 사회자는 거의 예외적일 정도로 적극적으로 토론의 흐름에 개입하였으며, 소수지배가 높은 토론이 되고 말았다. 사회자가 자신이 옳다고 믿는 쪽으

의 찬성론이 게시된 후에 아래와 같이 반대 입장이 조심스럽게 제시되었다.

번호: 9/61 토론자 : NEMOMAN

토론일시: 1999년 12월 03일 00:52 수 신자: ALL

주제: 어쩜 괜찮을지도

솔직히 이런 반대편 글을 올리면 욕 태바가지로 얻어먹을거 잘 알지만 하하^^ 그래도 성인 전용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게 아닐까요? 첫째로 주변 주거환경에 많은 악영향이 있을 것 같구요.. 둘째로 아직까지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의 극도의 호기심을 유발할 것 같군요. 하하 셋째로 상영 못 할만 하니까 아니한 것 아니겠어요?? 하하 '거짓말'은 진짜로 완죤히 포르노던데 … 하하

아마도 이런 주장이 현실공간에서 진행된 유사한 분위기의 공개 토론회에서라면 제시될 수 있었을까 의심스럽다. 이 게시물은 사이버공간의 공개 토론이 비록 표현들이 거칠고 형식을 갖추지 못하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입장이 솔직하게 제시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이 토론실이 주는 또 다른 교훈은 사이버공간의 자연발생적 토론에서는 과격한 발언이 쉽게 튀어나오지만 그러한 발언에 대한 참여자들의 관용도 그만큼 높다는 사실이다. 토론 전반에 올라온 아래와 같은 인신공격성 발언은 사이버공간에서 진행되는 자연발생적 공공토론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번호: 13/61 토론자: ANTIIDOL

토론일시: 1999년 12월 03일 12:21 수신자: ALL

주 제: 성인전용관은 포르노상영관이 아니라니까..

그린 혀소리를 하는 무식한 인간은 이 토론실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우선.. 성인전용관의 진짜 이름은 등급외 상영관이다.. 그리고 등급외 상영관은 포르노 상영관이 아니다.. 스텐리 큐브릭의 클락워크 오렌지같은 문제작을 상영하는 곳이다.. 무식한 새끼들은 입 닥쳐라..

얼굴을 맞대고 진행되는 현실공간에서의 토론이라면 이렇게 험악한 발언이 나올 수 있었을까? 사이버공간에서도 몇 년 전이라면 이렇게 자극적인 표현은 당장에 플레이밍을 일으키고 토론을 멈추게 했을 것이다. 그런데, 참여자들은 그 글을 마

〈표 1〉 성인전용영화관 토론실 개요

주제	성인전용영화관제도에 관한 찬반 토론	
기간	1999. 12. 2 - 1999. 12. 23	
토론내용	개시건수	60건
	찬성론	23건
	반대론	3건
	논제 외 발언	20건
	의사진행발언	6
	자료 개시	2건(사회자 개시)
	기타	6건(중복 및 삭제)
	S/N	0.99(18,383/18,617자)
	플레이밍	발생
	조정	거의 없음
	소수지배	없음
	이해/합의	합의 없음

각주: S/N = Signal-to-Noise ratio(신호-대-잡음 비)

이상으로 전개될 수 없다. 즉, 토론 참여자들이 어떤 합의에 도달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토론실은 합의를 지향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발표하는 공간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토론실에는 잡음의 량이 신호의 량을 넘어설 정도로 많았으며, 토론이 전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표 1〉 참조). 그렇다고 토론이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게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성인전용영화관 설치와 관련해 상상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견해가 거친 형태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제시되었다.

이 토론실이 주는 첫째 교훈은 사이버공간에 일어나는 자연발생적 토론에서는 찬반의 주장이 비교적 쉽게 제기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현실공간에서 토론의 분위기가 한쪽 주장으로 몰려 있을 경우 반대 입장을 제시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것은 사이버공간에서도 쉽지 않다. 특히 동호회와 같이 동질성이 높은 모임에서는 다수 입장에 반하는 주장을 제기하기란 크게 부담스러운 일이다.

개방적이고 자유주의적 분위기가 지배적인 사이버공간에서 성인전용영화관과 같은 제도에 반대하는 발언을 게시하는데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7건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민주주의 형태로서 대화민주주의를 제시하였다.

5. 정보사회에서 대화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가능한가?

대화민주주의 핵심은 대화이다. 사이버공간에서 어떤 공적 대화가 가능한가를 검토해 보면 정보사회에서 대화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짚어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아마도 자연발생에 가장 가까운 형태이면서도 일방적 독백이 아니라 대화를 주고받는 공공 토론이 일어나는 곳은 PC통신이나 인터넷 포탈사이트(portal site)의 공개토론실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PC통신 천리안의 공개토론장인 ‘열띤 토론 실’의 몇 가지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사이버공간이 어느 정도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지를 유추하고자 한다. 어떤 주제가 어떤 방식으로 논의되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공개토론실에 대한 양적인 분석보다 질적인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1) <성인전용영화관제도 토론> 사례

첫 사례는 정부와 국민회의가 성인전용영화관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국회에서 자민련과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쳐 좌절되자 개설된 토론실이다. 토론 초기에 성인전용영화관제도에 대해 찬성이 압도적이었으며, 전반에 반대론이 세 차례 나왔으나, 후반에는 다시 찬성 일변도로 돌아왔다. 토론은 중반에 플레이밍(flaming)이 출현하면서 주제에서 벗어나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진행되었다.⁸⁾ 이 때는 신호보다 잡음이 압도적으로 많아 토론의 진행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갖게 했다. 그러나 토론 종반에 극적으로 논제로 복귀하였다.

참여자들이 이 토론을 통해 성인전용영화관제도에 관한 다양한 입장을 얼마나 이해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지 않게 도움이 되었으리라 추측된다. 다만 이러한 공개토론실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

8) 플레이밍(flaming)이란 어떤 사람에 대해 성난 혹은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온라인 글쓰기를 말한다.

번호: 2081/2319 토론자: 폐미반석

토론일시: 2000년 01월 10일 14:39 수신자: ALL

주제: 2078글에 대한 폐미반석의 답변

군가산점을 둘러싸고 사이버공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글들이 소모적이거나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제 글이 그러한 오해를 일으쳤다면 우선 사과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했던 바는 군가산점을 옹호, 지지하는 이들이 군가산점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의 의도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단지 여남의 대결구도로 이 문제를 몰아가는 것을 중단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극단적인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 다른 네이티즌에게 욕설과 성적 모욕감을 주는 모습에서 벗어나 다양한 각도에서 군가산점의 문제를 조명해 볼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군가산점을 둘러싸고 사이버공간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토론들을 통해 토론에 임하는 이들이 어떠한 위치, 입장에서 논의를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로의 입장(옹호자와 폐지를 주장하는 자)이 얼마나 다른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번호: 2082/2319 토론자: 폐미반석

토론일시: 2000년 01월 10일 15:30 수신자: KYCHUNG

주제: 2080글에 대한 폐미반석의 답변

제가 쓴 글을 어떻게 읽으셨길래 그리도 오독하실 수 있는지 … 글을 쓴 이로서 정말 어이가 없군요. 제발 글을 제대로 읽고나서 올리시길 바랍니다. 앞서 글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군필자들에게 강압적으로 군복무를 의무화하는 것이 남성(국방부의 신체검사에서 통과한 남성들)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것만큼이나 군미필자들에게 군문제와 관련해서 그 어떠한 발언권과 선택권도 부여하지 않은 불합리한 사회구조 역시 전체 여성, 장애인, 신체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에 대한 차별입니다. 특정한 집단에게만 군복무를 허용하고 다른 집단은 아예 접근도 허용, 허락하지 않고 또한 특정집단이 수행한 의무에 보상과 혜택-군가산점-을 주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 차별과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제발, 앞서 제가 올린 글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다시 글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번호: 2087/2319 토론자: BRESHITH

토론일시: 2000년 01월 10일 18:28 수신자: 폐미반석

주제: 뭘 오해하고 계시는군요

페미반석님은 정말 본질을 모르고 계시는군요. 이문제를 남녀 불평등으로 몰고간것은 여성단체들이란 것 여성이란 걸 잊으셨군요. 두서없이 많이 쓰셨는데, 결론이 이거죠 남녀 평등이 아니라 필자와 미필자에 대한 문제라고. 제가 틀렸으면 말씀해주시죠. 페미반석님을 포함한 여러 단체들은 오류를 가지고있습니다. 첫째 군대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있습니다. 둘째 군대에 왜 가야하는지 모르고 계십니다. 셋째 우리 나라가 왜 징병제인지 그건 알고 계시겠죠. 간단하죠 가난해서 그립니다. … 이거도 모르고 계시는 것 같군요. 넷째 군에서 어떤 일을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계십니다. 다섯째 우리 나라 일부 지도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병역관계가 어떤지 모르고 계십니다. 여섯째 사건이 커지자 조금이나마 화살을 돌려보려고 무마할려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닌가요/여러 주장이 있지만 군대를 갔다 오지 못한 일부 남성들은 절대 가산점 폐지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있겠지만.. 일단 상황을 이해하시고 정말 군대가 뭐 하는 곳이고 어떻게 생활하며 돌아가는지를 아신다면 절대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없으실 겁니다. 우리 대다수의 군 필자들은 당연히 감정이 격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밥그릇을 지켜야 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보상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신성한 군의무를 짓밟는 쳐사입니다. 페미반석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지적수준과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친지분이나 혹은 아버님 오빠나 남편 분이 계시다면 남편 분께 동생 분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 잘못 말씀 꺼내셨다간 봉변을 당하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십시오. …

번호: 2108/2319 토론자: 가설병

토론일시: 2000년 01월 11일 01:14 수신자: 페미반석

주제: [답장] <군가산점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급선무>

님의 글을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읽어 보았습니다. 님의 글의 요지는 일부에게만 주어지는 군복무의무 자체가 평등에 문제가 있으며, 군가산점문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해석되네요. 틀리다면 지적바랍니다.

1. 신검에서 제외 혹은 탈락된 사람으로 하여금 열등성을 조장한다는 님의 글은 문제가 많네요. 대한민국에서 여성과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그리고 이상한 이유로 군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잘 알다시피 거의 육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무기체계 역시 채래식입니다. 전술역시 속공과 게릴라전법을 채택하고 있죠. 이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군 역시 육군 중심입니다. 그리고 무식하게(주로 몸으로 때우는) 훈련하죠. 훈련강도도 엄청 쌤죠. 유격훈련이나 혹한기 훈련은 신체건강한 남자들도 상당히 견디기 힘든 훈련입니

다. 위 글의 요지는 보병으로서의 힘든 훈련을 충분히 소화할 수 없는 사람을 미리 탈락시키는 것 같고 문제 삼아서는 안되죠.

2. 군가산점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에 대한 님의 글은 또 문제가 있네요. 님의 글은 여성단체 혹은 군가산점 폐지 찬성론자의 주장인지 남만의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남만의 생각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여성단체가 헌법소원한 것과 현재의 발표문을 읽어보셨는지 읽어보았다면 독해능력에 상당히 의심이 가네요. 헌법소원이나 현재의 결정문 그 어디에도 신체건강한 남성만의 군복무의무를 문제삼은 곳은 없습니다. 문제의 이 두 글에서의 주장한 한결같이 공무원시험에서의 가산점 부과가 헌법의 평등성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군가산점은 분명 위헌입니다. 병역의무 역시 위헌입니다. 님은 글 역시 병역의무의 위헌성을 문제삼았는데, 여성단체나 현재는 가산점이라는 모순의 원인이 되는 병역문제를 거론했어야하는데, 가산점 만 문제 삼은 것입니다.

3. 님은 군가산점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라는 거창한 문구를 쓰면서 논쟁의 핵심을 병역문제라고 했는데, 님의 글에는 아무런 주장도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지? 여성단체나 정부가 내놓은(불난집에 에어컨 켜는) 대안이라는 것이 모병제, 국가지원, 직업교육, 사기업의 호봉문제 등과 같이 현실성없는 것들만 니바구하는데, 님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속시원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땅한 대안이 없으면 여자들이나 신체장애자들도 남자사병과 같은 강도의 훈련을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북한 얘기는 꺼내지 마세요. 북한도 남자와 여자의 훈련강도는 다릅니다.

ps. 국방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패미반석님의 답변을 기다리며 …

종반 이후 연장된 기간 동안의 토론은 내용상으로 별로 진전이 없었다. 한 TV 방송국의 토론 프로그램이 동일한 주제를 다룬 내용에 대해 시비가 일어났고, 한 때 매우 자극적인 글이 올라와 그로 인한 약간의 소동이 있었을 뿐이다.

모든 공개토론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토론이 이러한 흐름을 갖는 경우 초반부의 격렬한 논란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것은 서로의 입장이나 감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써 중반 이후 토론이 진지하게 전개되는데 도움을 준다. 즉, 초반의 격정적 충돌은 중반 이후 토론자들이 상대방을 자극하는 극단적인 표현을 자제하면서 대화를 풀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 토론 전반에 각자의 입장이 극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곡해의 소지도 적고 성실한 참여에 대한 내재적 압력도 높

다. 후반의 독백(monologue)은 아예 무시되거나 아니면 비난의 대상이 된다. 이전 까지의 토론을 충분히 읽어보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사이버공간의 공개토론에는 토론의 질서를 유지하고 생산적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내재적 압력(internal pressure)이 작용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사이버공간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공적 토론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이다.

6. 결론

이 논문은 탈전통화된, 지구화된, 정보화된, 그리고 성찰성이 증대된 현대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 또는 민주주의 개념의 출현이 요청되는 배경을 밝혔으며 그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대화민주주의를 제시하였다. 대화민주주의는 정치 또는 민주주의의 개념을 사적 영역 뿐 아니라 전지구적 질서에 이르는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부각시켰다.

이 논문에서는 대화민주주의가 정보사회에서 어느 정도 진작될 수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사이버공간의 공공토론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긍정적인 가능성은 감지될 수 있었다. 이 논문에서 검토된 세 개의 공개토론실 — 1) 성인전용영화관 제도 토론실, 2) 국가보안법 폐지 토론실, 3) 군가산점 폐지 토론실 — 은 첨예한 현안에 관해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지기에 매우 횡량한 조건이었다. 그곳은 모두 익명성이 높고, 완전히 개방되어 있으며, 발언 형식과 내용에 대한 제재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나름대로의 토론질서가 존재했으며, 토론자들의 관용과 수용 수준도 상당히 높았다. 사이버공간의 공공토론은 정보사회에서 대화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있어 시민들을 위한 훌륭한 학습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덧붙여, 정보사회에서 대화민주주의의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전자공론장의 형성은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을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떠한 태도로 이용하는가에 성패가 달려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네티즌들이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중심축이며 토론과 관련한 이들의 자질과 능동성, 자율성 등이 중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다시 말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의사소통을

확장시켜 정치과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술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이 실제 이용에서는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달성의 핵심요건이 시민참여인 것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치참여를 진작시키고 나아가 네티즌들의 공공토론에 대한 그리고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의 활용에 대한 적극적이고 건강한 참여가 필수적인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이 논문은 사이버공간이 자기통제력, 자율성, 독립성, 상호존중성 등이 담보되는 공론장이 될 수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참고문헌

- 강정인(1994), “정보사회의 정치적 함의.” ’93 통신학술과제.
- 강정인(1998a), “세계화 그리고 민주주의의 미래.”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민주주의》. 문학과 지성사.
- 강정인(1998)b, “세계화와 민주주의.”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민주주의》. 문학과 지성사.
- 구정우(1998), “세계시민사회이론 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기든스 외(임현진 · 정일준 역)(1994), 《성찰적 근대화》. 한울, 1998.
- 김성국(1998), “정보사회의 정치생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정보사회의 이해》. 나남출판.
- 박주원(1999), “현대 민주주의론의 이론적 동향과 정치적 지형.” 《정치비평》. 푸른숲.
- 오연주(1995), “컴퓨터매개 커뮤니케이션의 공공영역 형성에 관한 연구: ‘대구지하철 가스 폭발사건’ 온라인 토론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 논문.
- 윤영민(1998), “정보사회와 세계화.” 《정보사회의 이해》. 나남.
- 이유진(1997), “PC통신, 인터넷과 한국의 전자 민주주의 가능성에 대한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제31집 제1호, 141-164.
- 조현욱(1995), “정보사회의 정치과정의 변화와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Archibugi, Daniele and David Held (eds.). *Cosmopolitan Democracy*. Cambridge: Polity Press.
- Calhoun, Craig(ed.)(1992), *Habermas and the Public Sphere*. The MIT Press.
- Castells, Manuel(1996), *The Rise of Network Society*. Malden, Mass.: Blackwell Publishers.
- Friedland, L.A.(1996), “Electronic democracy and the new citizenship,” *Media, Culture & Society*, 18.
- Foster, Mark(번역논문)(1999), “사이버민주주의.” 《현대사상》, 7권.
- Giddens, Anthony. 1990.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Stan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Polity Press.
- _____. (1992), *Transformation of Intimacy*, Polity Press.
- _____. (1994), *Beyond Left and Right*. Polity Press.
- Habermas, Jürgen(1989)(1962)),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The MIT Press.
- _____. (1996)(1992)), Between Facts and Norms. The MIT Press.
- Hacker, K.L.(1996), “Missing links in the evolution of electronic democratization. Media,” *Culture & Society*, 18, 213-232.
- _____. (1996)(1992)), *Between Facts and Norms*. The MIT Press.
- Held, David(1988)(1987)), 《민주주의의 모델》, 인간사랑.
- _____. (1992), “Democracy: From City States to a Cosmopolitan Order?” *Political Studies XL*,

Special Issue.

-
- _____ (1995), *Democracy and the Global Order*, Stanford University Press.
Neuman, W.R.(1986), *The paradox of mass politic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Schumpeter, Joseph A.(1950), *Capitalism, Socialism, Democracy*. New York: Harper & Row.

abstract

The Mode of Politics in Information Society: Possibilities of Dialogue Democracy

Hyunhee Kim* · Youngmin Yoon**

This paper consists of the following aspects: 1) it points out the problems of liberal democracy in the era of informatization and globalization; 2) it suggests dialogue democracy as an alternative for liberal democracy; 3) it investigates possibilities of dialogue democracy by analyzing the case studies of on-line public discussions. Our empirical analysis of on-line public discussion in the cyberspace reveals the feasibility of dialogic democracy. Three on-line public discussions examined in this paper holds in the conditions that are, many observers might think, inappropriate for dealing with hot issues. The discussions are held with anonymity and open to everyone, and there are no limits on forms and contents of postings. Nonetheless, there emerges an order in its own sense and participants show quite high tolerance to flamings. It is expected that on-line public discussions will provide significant opportunities for citizens to learn dialogic democracy.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Hanshin University. Research Area: Labor, Women's Studies, Information Society. Publication: "Women as Alternative Political Forces: Women's Voting Behavior in 1990s"(1999); "Globalization, Informatization, and Civil Society"(1999); *Politics of the Cyberspace and Formation of Civil Society*(1999, co-authored), *Working Class Stratification and the Demand for Unions in the United States*(1997)

**Professor, Department of Information Sociology, Hanyang University. Research Area: Information Sociology, Social Methods, Political Sociology. Publication: *Politics of the Cyberspace, Citizens-led informatization Society*(1999, co-authored), *Myth of Information, the Logic of Reform*(1998, co-authored), *Global Network*(1997, co-authored), *Theories of Cyberspace*(1996)